

제 4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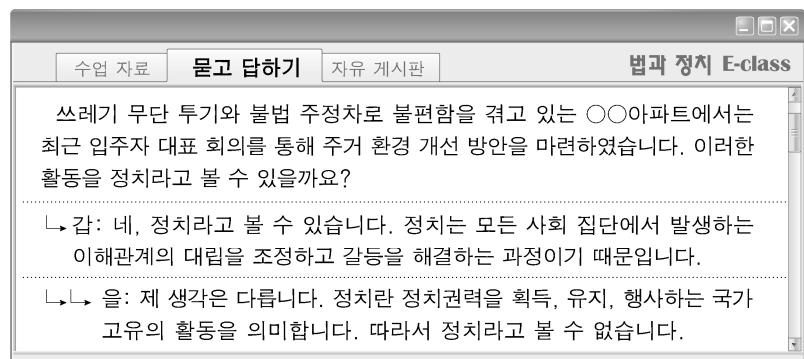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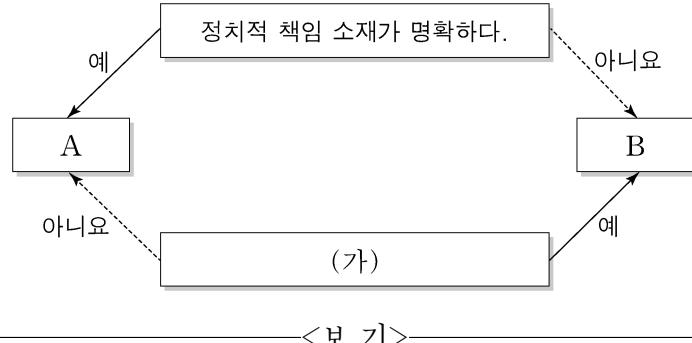
제 [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을의 관점은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 내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③ 갑의 관점에 비해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그림은 정당 제도 A와 B를 상대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보기>
- ㄱ. A보다 B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 ㄴ. B보다 A에서는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 ㄷ. (가)에는 '의원 내각제에서 단독 정부가 구성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가)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A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해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였다.

&lt;보기&gt;

- ㄱ. A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하다고 본다.
- ㄴ. B는 통치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 ㄷ. B와 달리 A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A, B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갑국과 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 형태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반면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리가 융합된 형태로서, 입법부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 ① 갑국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② 을국에서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 ④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보장된다.

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며,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하며, 국제 사회의 문제들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 ① (가)는 국가 간 권리 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 ② (가)는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성이 높다고 본다.
- ③ (나)는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보다 이성과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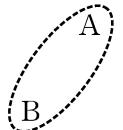
## 2 (법과 정치)

##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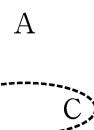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아래 그림은 <질문 1>, <질문 2>에 대해 ‘예’, ‘아니요’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것끼리 점선으로 묶은 것이다.

<질문 1>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는가?



<질문 2>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는가?



- ① A는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형성·발전되었다.
- ② B는 입헌주의 원리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③ B에서는 C와 달리 대의 기구를 통해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
- ④ C는 A와 달리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 ⑤ A에서는 B, C와 달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의 의회 전체 의석 수는 각각 300석으로 지역 대표 200명과 비례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다. 갑국과 을국 모두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지역 대표의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유권자는 지역 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 갑국의 선거 제도는 병립형으로 각 정당이 얻은 지역 대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비례 대표 의석수를 합쳐 정당별 총의석수가 확정된다.
- 을국의 선거 제도는 연동형으로 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으로 할당하고, 각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은 할당된 총의석수에서 지역 대표 의석수를 뺀 만큼 배정된다.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이다.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
| 정당 득표율(%)    | 40  | 30 | 20 | 10 |
| 지역 대표 의석수(석) | 120 | 50 | 20 | 10 |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

| 구분           | 가당  | 나당 | 다당 | 라당 |
|--------------|-----|----|----|----|
| 정당 득표율(%)    | 40  | 30 | 20 | 10 |
| 지역 대표 의석수(석) | 105 | 50 | 30 | 15 |

- ① 갑국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200개이다.
- ② 을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 ③ 을국의 가당 비례 대표 의석수와 라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같다.
- ④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을국의 선거 제도를 적용하면,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많다.
- ⑤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갑국의 선거 제도를 적용하면, 나당, 다당, 라당과 달리 가당의 의회 의석률은 높아질 것이다.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정치 참여 집단 A~C의 특성을 비교하면 A와 B는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공통점이, B와 C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 ③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 ④ B, C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⑤ C와 달리 A, B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을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을은 갑을 ○○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특례법 조항에 따라 갑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을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A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 특례법 조항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A 행方が 근본적으로 봉쇄됨으로써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률 조항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보기>

- ㄱ. 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ㄴ. 을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ㄷ. A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 ㄹ. 헌법 재판소는 입법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A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국가 간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명시적 합의입니다.  
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병: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법 원칙입니다.

교사: 한 사람만 빼고 옳게 발표했네요.

- ① 국제기구는 A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A는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 ③ 우리나라에서 A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 ④ A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⑤ A의 예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 11.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우리 헌법은 직접 민주제 요소로 A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해 또 다른 직접 민주제 요소인 B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B가 실시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기 내라도 해당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A를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 ② 헌법 개정을 위한 A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요구된다.
- ③ B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④ B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
- ⑤ B가 도입될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국민이 탄핵 소추할 수 있다.

##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헌법은 입법 기관인 A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의결된 법률안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B가 일정 기간 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결 문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C의 제청으로 D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 ①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검사한다.
- ②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A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 ③ B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C와 D의 모든 구성원을 임명한다.
- ④ B는 사면, 감형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D를 견제 할 수 있다.
- ⑤ A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A의 행위는 D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lt;보기&gt;에서 고른 것은?

고등학생 갑(16세)은 경연 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를 같은 반 친구인 을(16세)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매매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갑과 을은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lt;보기&gt;

- ㄱ. 갑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ㄴ. 을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ㄷ. 을은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ㄹ. 갑이 을에게 자전거의 시가를 속여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lt;보기&gt;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X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서 X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 방문한 을은 종업원 병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신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고 요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를 귀찮게 여긴 병은 을의 요구를 주방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에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 을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성대가 훼손되었다. 이 사고로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X 건물에 방화를 하였다. 그런데 X 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점 안에 있던 정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lt;보기&gt;

- ㄱ.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ㄴ.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ㄷ. 갑이 정에게 건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ㄹ. 을이 A에게 건물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모두 배상하였더라도, 정은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lt;보기&gt;에서 고른 것은? [3점]

- 2018년 3월 5일 갑은 본인 소유의 X 주택을 보증금 4억 원에 을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 2018년 3월 15일 을은 X 주택을 인도받아 살기 시작하였고 2018년 4월 16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 2018년 6월 16일 갑은 X 주택을 병에게 8억 원에 매도하면서 병이 갑에게 대금을 완납하면 X 주택이 병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019년 5월 7일 병은 X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갑에게 매매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 2019년 7월 9일 B에 의해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9년 8월 19일 정에게 6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음은 경매 신청 당시의 X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 【 읊구 】 |        |                     |                    |   |
|--------|--------|---------------------|--------------------|---|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1      | 저당권 설정 | 2018년 4월 16일 제○○○○호 | 2018년 4월 16일 설정 계약 | 채권액 금 3억 원<br>채무자 갑 (이하 생략)<br>저당권자 A (이하 생략) |
| 2      | 저당권 설정 | 2018년 5월 9일 제○○○○호  | 2018년 5월 9일 설정 계약  | 채권액 금 1억 원<br>채무자 갑 (이하 생략)<br>저당권자 B (이하 생략) |

&lt;보기&gt;

- ㄱ. 2019년 5월 7일 병은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2019년 7월 9일 병이 을에게 X 주택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 을은 임차권을 주장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ㄷ. 을은 X 주택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 A와 동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ㄹ. B는 X 주택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 A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4 (법과 정치)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4년 5월: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두 자녀 A(3세)와 B(13세) 모두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친권은 을이 가지기로 함.  
2015년 1월: 갑은 병과 재혼함.  
2016년 2월: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함.  
2019년 7월: 병이 갑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병은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함.  
2019년 8월: 병이 사망함.

<보기>

- ㄱ. 병의 사망 당시 을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지 않는다.
- ㄴ. 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갑은 ○○대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18세가 된 B가 갑과 을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B에 대한 을의 친권은 소멸된다.
- ㄹ. 을이 사망하면, A와 B가 을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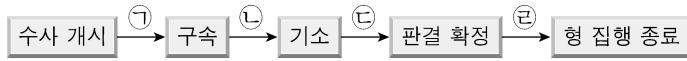
1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범죄 성립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A, B는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C는 행위자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 A는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로서 A에 해당하면 대개 B는 인정되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B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C는 행위자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은 의미한다.

- ①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하였다면, A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B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도 치료 감호 처분은 가능하다.
-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절도 행위를 하였다면, B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라도 방화를 하였다면, C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 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면, A에 해당하더라도 B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을의 고소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 ① ① 단계에서 상해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② 단계에서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③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 ④ ④ 단계와 ⑤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의 주체는 동일하지 않다.
- ⑤ ⑤ 단계에서 갑은 판사의 지휘에 의해 가석방될 수 있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5세)은 동생 을(9세)과 길을 걷던 중, 머리 위로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려다 같이 가던 병(18세)을 밀쳤고 그 결과 병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그 사정을 몰랐던 병은 순간 화가 나 갑과 을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갑과 을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양갈음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갑과 을은 병의 노트북을 훔쳐 사용하다가 정에게 팔아 버렸다. 며칠 후 정이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본 병은 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트북을 되찾았다.

- ① 병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와 관련하여 갑과 달리 을에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 ② 절도 행위와 관련하여 을과 달리 갑에게는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절도 행위를 이유로 갑이 기소되었다면, 형사 법원은 형벌 외에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④ 갑과 을에 대해 상해 행위를 한 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 ⑤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되찾은 병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쟁의 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근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 (가)

갑과 을은 각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 노동 위원회에 A 회사의 해고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의 구제 신청만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한 A 회사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을은 각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갑과 A 회사는 각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① (가)에서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에 대한 해고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갑과 을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A 회사의 해고로 인해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③ (나)에서 을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과 별도로 A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과 달리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⑤ (다)에서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갑에 대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